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다중이해당사자주의 모델과 영향력

유인태 (단국대학교)

본 글은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이 갖는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글로벌 그리고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이 국제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세 사례를 조사해 보았는데, 첫 번째 사례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의 다중이해당사자주의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에 기반해서 주권 국가의 이익과 독립적으로 움직임을 선택하는 것을 보이고자 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에 기반해서 운영되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보이고자 했다. 그 사례로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동맹(The Alliance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에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A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으로의 변화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WCIT-12에서의 선택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과 연관되어 있었음을 주장하고, 최근 2022년에 개정된 한국의 인터넷주소자원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러한 변화가 향후 갖는 함의를 논한다. 결론을 대신하여, 본 글은 최근 UN 사이버 OEWG에서의 논쟁과 결부시키며,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어떤 모델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목 차

I. 서론

II. 본론

1. 미국의 ICANN 설립, Post-IANA 체제, 그리고 강대국 전략 경쟁
2. 인터넷 거버넌스포럼(IGF)과 미국 디지털 외교 전략
3. 한국의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국내 기반과 인터넷주소자원법

III. 결론을 대신하여

미국 정부는 2016년 9월 IANA 관리권한 이양(the IANA stewardship transition)을 이행하였음. 그 이후, 비록 책임성(accountability)를 향상시킬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으나, ICANN 자체에 대한 이전과 같은 비판은 사그라들었다. 즉, 다중이해당사자주의를 보다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변환을 이루었다는 것에는 많은 이가 합의하고 있음

I. 서론

- ◆ 본 글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이 갖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함. 특히, 글로벌 그리고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이 국제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
- ◆ 이런 목적으로 크게 세 사례를 조명함. 첫 번째 사례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의 다중이해당사자주의가 주권 국가의 이익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기반임을 보임. 두 번째 사례에서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에 기반해서 운영되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보임. 마지막으로, 2022년 개정된 한국의 인터넷주소자원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 및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의 함의를 논하며 글을 마침.

II. 본론

1. 미국의 ICANN 설립, Post-IANA 체제, 그리고 강대국 전략 경쟁

- ◆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ICANN는, 비록 설립 초기부터 다중이해당사자주의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널리 인식되었으나, 사실 그 태생부터 다중이해당사자주의를 구현해내기에 한계가 존재했음. 이러한 한계에 대한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에드워드 스노우든(Edward Snowden) 사태와 같은 미국의 감시 행태의 폭로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방식 대한 대두된 비판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미국 정부는 2016년 9월 ‘IANA 관리권한 이양(the IANA stewardship transition)’을 이행하였음. 그 이후, 비록 책임성(accountability)를 향상시킬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으나, ICANN 자체에 대한 이전과 같은 비판은 사그라들었다. 즉, 다중이해당사자주의를 보다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변환을 이루었다는 것에는 많은 이가 합의하고 있음(유인태 외 2017; Radu 2019).
- ◆ ICANN의 기원은 1998년의 설립임. 그런데 설립 과정과 그 결과는 반드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었음. ICANN 설립 이전에

는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Internet community)’가 있었음. 그리고 당시 이들을 대표할 만한, 소위 인터넷의 “아버지”라 불리던 빈트 서프(Vint Cerf)는, 인터넷의 주소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루트 권위(root authority)’를 미 상무부와 계약 하에 있던 네트워크 솔루션(Network Solutions Inc)으로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게 되돌리기 위해 ‘인터넷 사회(the Internet Society, ISOC)’를 1991년 6월에 창립하였음. 그리고, 미국 국방부, 더 넓게는 미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될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 ISOC을 중심으로 상표권 소유자들, 지적재산권 관련자들을 불러 모은 바 있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미 상무부와 계약 하에 있던 네트워크 솔루션(Network Solutions Inc)의 루트 서버 관리 권한이, 그 계약이 끝나는 1998년 1월에 ISOC으로 이양될 것으로 예상케 했었음. 그러나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개발 수석고문(the senior advisor for policy development) 아이라 매거지너(Ira Magaziner)는 그러한 움직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대응하였음.

- ◆ 이에 “인터넷의 신”이라고 불린¹⁾ 존 포스텔(Jon Postel)은 1998년 1월 28일에 움직임. 12개의 인터넷 지역 루트 서버 중 8개의 조작자들에게, 미정부가 소유하고 ‘네트워크 솔루션(Network Solution Inc.)’이 작동시키고 있던 마스터 루트 서버인 ‘루트 서버 A’와 일상적으로 행사는 동기화를 중지하고, 남가주대학 캠퍼스에 있는 자신의 서버를 진정한(authoritative) 루트 서버로 인식해달라는 요청 메일을 보냄. 이에 8개의 지역 서버는 순응하지만 나머지 4개의 지역서버, 즉, 미항공우주국(NASA), 미군(the U.S. military), 발리스틱 연구소(Ballistics Research Lab), 그리고 네트워크 솔루션은 기존의 서버를 루트 권위(root authority)로 인정하면서, 인터넷은 두 개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양분됨.
- ◆ 이 상황에 미 정부는 즉각적으로 반응함. 무엇보다, 미 정부는 포스텔에게, 그러한 행동의 대가는, 남가주대학의 파산과 개인에 대한 법적 소송을 불사할 것이라는 위협을 가함. 위협의 결과로 포스텔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고(Goldsmith and Wu 2006), 미 정부는 이 계기를 통해 “녹색 보고서(Green Paper)”를 발간하게 되며, 인터넷 루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완전한 권위를 주장함. 이 녹색 보고서의 발간은 인터넷 거버넌스가 기존의 모델과 결별하며, 강력한 정부의 존재가 부상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이 되었음.

1) “Postel Disputes,” The Economist, February 8, 1997

◆ 다른 한편, 미국 정부는 같은 해 1998년 ‘백색 보고서(White Paper)’에서 ICANN 수립 계획을 발표함. ‘백색 보고서’에서 밝힌 ICANN 수립 계획은, 사적 영역에게 DNS 관리의 주도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었음. 이는 어떤 면에서 기술자들과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갖고 있던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이상을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함. 그러나 실상은 여전히 ICANN은 미국 상무부와 계약 하에 놓이게 되었고, 루트 존 파일을 담고 있는 컴퓨터는 여전히 미국 정부의 통제와 소유권 하에 있는 것이었음. 미국 정부에 의한 ICANN 수립의 진정한 이유는, 미국 정부가 주소자원의 일상적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지식도 갖지 못했기 때문이며, ICANN을 통해 그러한 운영을 하기 원했기 때문임. 또한, 단 하나의 국가가 루트를 통제할 권리는 없다는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음. 따라서 ICANN 수립에는 민영화, 국제화, 자기 규제라는 수식어가 동반되어 사용되었음. 타국에 의한 주소 자원 규제의 움직임을 막아내고, 미국 정부가 일상의 루트 서버의 운영을 관리하며,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ICANN이라는 조직이 고안되었고,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했었음.

◆ 그런데 미 정부 주도의 다중이해당사자주의를 구현하던 ICANN은 점차 그 정당성에 도전을 받게 됨.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 ICANN의 정당성에 대한 글로벌 도전이 현현한 사건이 2001년 유엔 총회 결의로 2003년에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개최였음. 이 개최 결정은 진작부터 미국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ICANN에 의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의구심과 회의감이 팽배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줌. 더욱이 ICANN 수립 당시에 미 상무부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루트 권위를 2006년 가을까지는 축소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는데, 이 약속을 2005년 6월 미국 정부가 지키지 않음. 이에 더욱 반발한 국제사회는 튀니스에 열린 2차 WSIS는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다중이해당사자주의 구현을 위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를 설립하게 됨(유인태 외 2017; Goldsmith and Wu 2006; Mueller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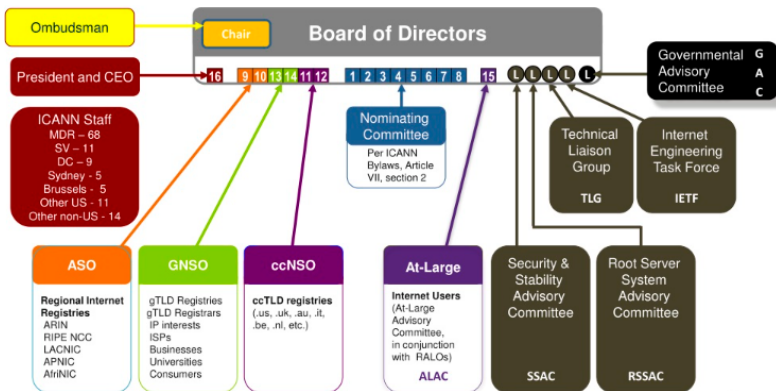
◆ ICANN 설립 초기부터 제기되어왔던 국내외 이해당사자들의 비판에 대해, 미국의 궁극적 대응은 미 상무부의 통신정보관리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에 의한 2014년 3월 14일의 ‘IANA 관리권한 이양(the IANA stewardship transition)’ 발표였음. 그리고 2016년 9월 30일의 실제적 이행으로 기존의 국내외 비판은 대부분 종식되었음. 이로서 계약 관

ICANN 설립 초기부터 제기되어왔던 국내외 이해당사자들의 비판에 대해, 미국의 궁극적 대응은 미 상무부의 통신정보관리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에 의한 2014년 3월 14일의 ‘IANA 관리권한 이양(the IANA stewardship transition)’ 발표였음

계를 통해 IANA 기능에 최종적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정부의 기존 권한이, “이양 후 IANA(Post-Transition IANA)” 법인이 수립되고, 그후 개칭되어 ‘공공기술식별자(Public Technical Identifier, PTI)’라는 법인에게 이전됨. 이 PTI를 통해 IANA를 기능을 수행케 함으로써, 기존과 다른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이 인터넷 거버넌스에 정착하게 됨(Hofmann 2016; Radu 2019).

- ◆ 상기한 바와 같이 기존에는 NTIA가 계약을 통해 IANA의 최종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양 후에는 ICANN 이사회(Board)와 PTI 이사회가 법률적으로 분리되어 이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유인태 외 2017의 <그림 1> 참조). 그리고 ICANN 이사회에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할당 기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 ISP)와 같은 도메인 네임 관련 기구들, 그리고 후보추천위원회가 투표권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 외에도 일반 이용자 그룹(ALAC), 정부자문기구(GAC) 그리고 기술 표준 및 보안과 관련된 그룹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그림 1. 참조).²⁾

<그림 1> ICANN의 다중이해당사자 모델



source: <https://www.icann.org/>

- ◆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정부 행위자가 최종행위자로 존재하는 수직적 구조에서 탈피하게 하였음. 그리고 이사회 내의 정부 및 비정부 행위자가 동등하게 논의하며 인터넷 정책을 논의 및 결정하는 수평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음. 이는 자발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동시에 수평적으로 분산된 거버넌스 형태로 더욱 이동하였음을 의미함(유인태 외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정부 행위자가 최종행위자로 존재하는 수직적 구조에서 탈피하게 하였음. 그리고 이사회 내의 정부 및 비정부 행위자가 동등하게 논의하며 인터넷 정책을 논의 및 결정하는 수평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음

2) 더 자세한 참가자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라: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groups-2012-02-06-en>.

2017). 또한 “글로벌 다중이해당사자 공동체(global multistakeholder community)”라는 용어에 기반해,³⁾ ICANN 내에서 “권한 강화된 공동체(empowered community)”의 설립이 가능케 되었고, 그 결과 ICANN 내의 모든 지원 조직들, 정부자문위원회(GAC), 사용자자문위원회(At-Large Advisory Committee)는 주요 선언 전에 자문을 하거나, ICANN 이사회의 결정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물론 이러한 거버넌스로의 전환 후에도 책임성(accountability)에 관련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전과 같은 인터넷 공공정책 관련 결정을 내리는 정당성(legitimacy)에 대한 비판은 불식되었다고 할 수 있음(Radu 2019, 175; 178).

여전히 미국 내의 ICANN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지만, 이사회 내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또 그들에게 심의뿐 아니라 의결권을 부여했다는 면에서 넓게 분산된 다중이해당사자 거버넌스 모델의 방향으로 거버넌스 양식이 이동했다고 할 수 있음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강대국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대두된 우려 중 하나는 스플린터넷(splinternet)임. 이러한 전반적인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수평적으로 분산된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은, 주요(critical) 인터넷 자원 거버넌스와 관련한 사안 영역에서, 강대국 갈등과 대립의 방향으로의 해당 자원의 사용에 제동을 걸고 있음

◆ 거버넌스 양식(modality) 차원에서 요약하자면, ICANN의 최초 설립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의 모습을 띠었었음. ICANN의 설립을 통해, 비록 IANA 기능은 민간 기구가 담당하게 되지만, 미국 정부와의 계약 관계에 있는 한, 최종적인 통제권이 미국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궁극적 통제 권한을 가지는 정부 주도의 인터넷 거버넌스의 양상으로 바꾸고자 한 것임. 그런데 2016년 9월 30일의 ‘IANA 관리권한 이양(the IANA stewardship transition)’ 이행 이후,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 양상에는 변화가 생긴 것임. PTI의 계약 당사자가 여전히 미국 내의 ICANN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지만, 이사회 내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또 그들에게 심의 뿐 아니라 의결권을 부여했다는 면에서 넓게 분산된 다중이해당사자 거버넌스 모델의 방향으로 거버넌스 양식이 이동했다고 할 수 있음.

◆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거버넌스 모델로의 이동이 가지는 국제정치적 함의임. 최근 강대국 간에, 특히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 경쟁은 최근 더욱 격화되고 있음. 2017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출범 이후, 현시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 혹은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이후, 더 심해진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강대국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대두된 우려 중 하나는 스플린터넷(splinternet)임.⁴⁾ 이러한 전반적인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수평적으로 분산된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은, 주요(critical) 인터넷 자원 거버넌스와 관련한 사안 영역에서, 강대국 갈등과 대립의 방향으로의 해당 자원의 사용에 제동을 걸고 있음.

3) 이 용어는 NTIA가 2014년 3월 IANA 관리이양을 언급하며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누구를 포함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의된 바 없이, 열려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공백은 “권한 강화된 공동체” 설립으로 이어졌다.

4) <https://www.wired.com/story/russia-splinternet-censorship/>

- ◆ 예를 들어, 2022년 2월 28일 ICANN 정부자문위원회(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 GAC)의 우크라이나 대표가 “.ru”, “.p ϕ” and “.su”을 DNS 루트존(root zone)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었음. 게다가 러시아에 있는 DNS 루트 서버의 셧다운도 요구하였음.⁵⁾ 같은 달 24일에 있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프로파간다와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DNS 규제 영역에서 러시아의 인터넷 접근에 대한 제재를 요구한 것임. 이러한 우크라이나 대표의 요청에는 디지털 전환장관(Minister of Digital Transformation)의 서명도 첨부되었었음.
- ◆ 그러나 2022년 3월 2일 ICANN의 CEO는 우크라이나의 디지털전환부의 부장관에게 보내는 응답에서 강력한 어조로 해당 요청을 거절함.⁶⁾ 그 근거로서 ICANN의 목적이 단 하나의, 전 지구적, 상호작용가능한 인터넷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동시에 ICANN은 기술전문가, 비즈니스,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로 구성된 탈중양화된 다중이해당사자 공동체라는 것을 밝히며, 한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는 ccTLDs를 무능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경제 제재로 인해 금융이나 제품, 생산과 관련한 영역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서방과는 한 층 더 갈라지는 와중에, 인터넷 주소 자원이라는 인터넷 거버넌스 논리 층의 핵심 자원은 스플린터넷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으며, 그 중심에는 “글로벌 다중이해당사자 공동체(global multistakeholder community)”가 있었음.

2.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과 미국 디지털 외교 전략

- ◆ WSIS에서 비롯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이 출범한 맥락에 대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미국 정부가 통제권을 갖는 PTI 이전의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비판이 있었음. 따라서 IGF는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용어에서 거버넌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인터넷 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태생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개념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는 IGF가 그만큼 이런 용어들을 가장 이상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기구임을 시사하고 있음.
- ◆ 예를 들어,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용어 그 자체는 이전에는 사용되고 있

5) <https://pastebin.com/DLbmYahS>

6) <https://www.icann.org/en/system/files/correspondence/marby-to-fedorov-02mar22-en.pdf>

지 않았는데, 2003년의 제네바에서의 첫 단계 WSIS 개최를 위한 협상 과정인 2월의 서아시아 지역 모임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음(Kurbalija 2014, 8). 그 전에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용어의 개념 정의는 수많은 이해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했었지만, 많은 논란 끝에 2005년의 WSIS의 결과물인 ‘튀니스 아젠다(Tunis Agenda for the Information Society)’에서, 인터넷 거버넌스란 “정부, 사적 영역, 시민 사회에 의한; 각자의 역할 가운데; 인터넷의 진화와 사용을 형성하는; 공유된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 절차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라는 정의에 합의를 이루었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교환하고 합의를 이루어내는 장으로서 IGF는 계속 기능해 오고 있음.

- ◆ ‘다중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라는 용어 또한 인터넷 거버넌스 영역에 들어온 것은 2005년이며, 이때 WSIS의 인터넷 거버넌스 작업반(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 WGIG)이 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함. WGIG는 인터넷의 공공 그리고 민간 규제라는 구분이 WSIS 협상의 많은 부분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3의 대안적 개념으로서 해당 용어를 제안하였음(Hofmann 2016, 35). WSIS 이후에는 다중이해당사자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되어 인터넷 거버넌스 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음.
- ◆ IGF는 디지털 영역에서 다중이해당사자주의를 보이는 전형적 기구가 되었음(유인태 외 2017; Hofmann 2016; Mueller et al. 2007).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 작용에 있어, 위계적 권위 체계 없이, 인터넷 정책들을 논의하며, 행위자들의 수나 발언의 절차나 무게도 합의 형성 과정에서 균등하게 간주됨. 비록, 실질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토크샵(talk shop)”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지만(Mueller 2010),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행위자들 간에 논의를 하는 장을 IGF는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그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정책이나 행위를 취하고자 함. 따라서 IGF는 본 논문의 거버넌스 양식 구분에 따르면 넓게 분산된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을 잘 반영하고 있음.
- ◆ 이러한 IGF가 실제로 논의 과정을 통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외교 정책에, 더욱이 점증하는 미중 전략 경쟁의 맥락에서 국제정치적 영향을 미치기도 함.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토크샵이라고 비판까지 받고 있는 IGF가, 넓게 분산된 다중이해당사자 모델로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2022년 4월 28일 미국 정부가 내놓은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A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을 통해 볼 수 있음.⁷⁾

- ◆ 무려 60여개국이 인정한 이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은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국 주도의 인터넷 거버넌스를 재점화하기 위한 시도임. 그 선언의 서두가 기술하고 있는 가치들은, 미국이 생각하는 디지털 기술들의 목적을 명확히 나타나고 있음. 그것은 연결성, 민주주의, 평화, 법에 의한 지배,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인권과 근본적 자유의 향유를 증진하는 것임. 또한 미국 정부가 견지해온 인터넷이 지향해야 할 가치들, 즉 인터넷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작용성을 담지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음.
- ◆ 선언문의 이러한 가치 지향성은 ‘인터넷의 약속을 되찾기(Reclaiming the Promise of the Internet)’라는 절에서 상술됨. 선언문에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인터넷의 고유 식별 시스템의 작동은, 인터넷 분열(Internet fragmentation)을 피하기 위해 애초부터 다중이해당사자 접근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이 접근은 선언문이 지향하는 비전의 근본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음. 인터넷 분열을 반대하는 맥락에서 해당 절은 온라인 플랫폼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다른 인권과 근본적 자유들의 부인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나타내고 있음. 나아가, 그런 정부들에 의한 개인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에 대한 우려 및 그들이 퍼뜨리는 거짓 정보로 인해 위협 받는 인권과 민주주의 제도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 ◆ 선언문은 크게 다섯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있음. 이 원칙들은 국가의 정책이나 행동으로 변환되기 위한 비구속적인 성격의 것들이지만, 흥미로운 점은 다중이해당사자 체계를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적 모드로서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보편적인 원칙이자, 유엔, G7, G20, OECD, WTO, ICANN, IGF, Freedom Online Coalition에서 적용 가능한 원칙으로 포함시키고 있음.
- ◆ 선언에 참여하는 자들은 특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환경이란 우리들의 민주주의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시민들의 민주

무려 60여개국이 인정한 이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은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국 주도의 인터넷 거버넌스를 재점화하기 위한 시도임. 그 선언의 서두가 기술하고 있는 가치들은, 미국이 생각하는 디지털 기술들의 목적을 명확히 나타나고 있음

인터넷 분열을 반대하는 맥락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다른 인권과 근본적 자유들의 부인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나타내고 있음. 나아가, 그런 정부들에 의한 개인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에 대한 우려 및 그들이 퍼뜨리는 거짓 정보로 인해 위협 받는 인권과 민주주의 제도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7) White House. 2022. “A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4/Declaration-for-the-Future-for-the-Internet_Launch-Event-Signing-Version_FINAL.pdf)

선언문은 크게 다섯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있음. 이 원칙들은 국가의 정책이나 행동으로 변환되기 위한 비구속적인 성격의 것들이지만, 흥미로운 점은 다중 이해당사자 체계를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적 모드로서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보편적인 원칙이자, 유엔, G7, G20, OECD, WTO, ICANN, IGF, Freedom Online Coalition에서 적용 가능한 원칙으로 포함시키고 있음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동맹(The Alliance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⁸⁾에는 핵심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네트워크 인프라에 오직 신뢰할만한 제공자만을 사용하기로 하는 책무("a commitment to use only trustworthy providers for co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network infrastructure)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 때의 청정 네트워크(Clean Networks)를 연상시킬 뿐 아니라, 인터넷의 분할, 사이버 공간의 안보화,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제품 공급망의 디커플링의 맥락과 같음

적 과정에의 적극적 참여를 증진해야 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며, 글로벌 인터넷의 분열(splinter)하려는 노력들에 저항하고, 자유롭고 경쟁적인 글로벌 경제를 증진하는 환경을 의미함. 물론, 이런 지향성은 모든 지구상의 정부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며, 특히 권위주의 정부를 갖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은 서구와 마찬가지로 수준에서 찬동하지는 않을 것임. 그러나 이 선언에 대한 참여는 권위주의 국가를 포함해 모든 열려 있을 뿐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적어도 레토릭 상으로는 유사한 원칙을 내걸고 있는 경우가 많음.

- ◆ 사실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A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은 그 전에 바이든 정부에 의해 기안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동맹(The Alliance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⁸⁾의 수정판임. 그리고 해당 선언의 이전 판은, “선언”에서 보인 어조와 상당히 다름. 이전 판에서는 다중 이해당사자적 접근보다도, 훨씬 더 정부 간 다자주의를 지향했으며, 자유주의적 가치보다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국가 안보적 우려가 지배적으로 나타났음.⁹⁾
- ◆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동맹(The Alliance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에는 핵심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네트워크 인프라에 오직 신뢰할만한 제공자만을 사용하기로 하는 책무(“a commitment to use only trustworthy providers for co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network infrastructure)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 때의 ‘청정네트워크(Clean Networks)’를 연상시킬 뿐 아니라, 인터넷의 분할, 사이버공간의 안보화,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제품 공급망의 디커플링의 맥락과 같음(Yoo 2022). 그리고 해당 문서에서 여러 번 사용하는 “배반(defection)” 용어는 적대적 그룹을 상징한 용어이며, 이에 속하는 자에게 불이익과 자국의 그룹에 속한 자에게 이익을 제공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음. 이러한 지향성은 스플린터넷(splinternet)에 더욱 힘을 실는 꼴이었으며, 인터넷 커뮤니티의 관점에서선 미국의 이익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는 행보였음. 그리고 이 문건은 2021년 12월에 있었던 민주주의 정상회의(The Summit for Democracy)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음.

8) <https://www.politico.com/f/?id=0000017c-e71b-d8e1-a57c-efffa3810004>

9) 다음의 웨비나를 통해서도 이를 볼 수 있다. (<https://www.ustelecom.org/event/transatlantic-tech-partnerships/>)

- ◆ 하지만,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A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에서 보이듯이, “동맹”이라는 용어는 “선언”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음. 즉, 다자주의에 기반한 배제적인 집단 형성과 노골적인 편가르기는 없어졌으며, 중국 통신 장비 업체나 서비스 제공자를 배제하거나 겨냥하는 내용도 없어졌음. 수많은 중국제 디지털 제품들을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 자국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구분하는 어려움은 차치하고, 소속된 국가들에게 어떻게 유인책을 제공하고, 배반하는 국가들에게 인터넷 거버넌스 상 어떻게 불이익을 줄지는 또 다른 큰 문제이기도 했음. 나아가 징벌적 차원에서 배제를 한다는 것은 곧 스플린 터넷을 의미했었기 때문에, 통합된 인터넷을 지향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커뮤니티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도 했음.
- ◆ 이러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동맹(The Alliance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에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A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으로 내용 변화는 미국 국제 전략의 방향성에 있어서 큰 변화였음. 그리고 이에 는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을 통한 시민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존재했음. 선언문의 작성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백악관의 기술·경쟁 정책을 위한 특별보좌관 팀 우(Tim Wu)는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 “동맹” 문헌이 유출되고, UN의 IGF 패널에 참여한 바 있었는데, 그 참석 이후엔 “선언” 문헌이 나오게 되었음. 그 IGF 패널은 위키미디어 재단(Wikimedia Foundation)의 메키넨(Rebecca MacKinnon)이 사회를 보던 패널이었음.¹⁰⁾ 이는 팀 우가 인권이나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결성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글로벌 다중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임.

3. 한국의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국내 기반과 인터넷주소자원법

- ◆ 한국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법 제도화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2004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인주법)’ 제정임.¹¹⁾ 2004년의 인주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당시 급속히 이루어지던 인터넷 보급의 확산과, 직전 연도인 2003년도에 발생한 ‘1.25인터넷침해사고’와 같은 사고들의

10) <https://www.internetgovernance.org/2021/12/09/can-the-us-lead-a-new-internet-alliance/>

11) 한국인터넷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라. (<https://sites.google.com/site/koreainternethistory/year-table?authuser=0>).

발발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의 안정적 운영의 필요가 대두되었음.¹²⁾ 이에 2004년의 인주법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National Internet Development Agency of Korea, NIDA; 현 KISA)’의 출범이 포함되었음. 2004년 인주법에 따라, 원래 1999년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를 위해 비영리 민간기구로 출범한 NIDA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개편되었음. 그리고 NIDA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ANA),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정보센터(APNIC) 등의 다양한 인터넷 거버넌스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위한 국내 컨택 포인트가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을 대표하는 기구가 되었음.

2004년 인주법은 인터넷 거버넌스가 민간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되고, 특히 인터넷 주소자원 관련 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전환점이 됨. 이러한 변화에는 상기한 바와 같은 인터넷 보급성과 그 자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소자원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도 있었음

- ◆ 2004년 인주법은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가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전환되었던 변곡점이었음. 그전에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KRNIC)가, 그리고 그전에는 전길남 박사와 같은 학계와 기술계의 이해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인터넷 주소자원을 관장(govern)하고 있었음. 즉, 2004년 인주법은 인터넷 거버넌스가 민간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되고, 특히 인터넷 주소자원 관련 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전환점이 됨. 이러한 변화에는 상기한 바와 같은 인터넷 보급성과 그 자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소자원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도 있었음.
- ◆ 그러나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로의 변화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약하는 것이기도 하였음. 예를 들어, 신설된 NIDA는 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 위원회는 법안을 심의 혹은 법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결권이나 거부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음. 더욱이 주소정책심의위원회는 인원수가 10명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위원회에 속하기 위한 자격도 상당히 국한되는 것이었음. 위원회의 구성도 반드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음(개정전 인주법 제6조 ④항). (<표1>참조)

12)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0548816815197.pdf>

표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비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36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6조(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이하 "주소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주소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주소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1.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대학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분야를 전공한 사람	3. 인터넷 등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정보통신 관련 기업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정보통신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으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이러한 국내의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의 양상은 국제정치적 함의를 가진.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2012년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의 12월에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WCIT-12)였음. 당시 WCIT-12 개최는 유례 없을 정도로 큰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는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s, ITRs)의 수정 여부를 국가들 간에 논의하는 장이었기 때문임. ITRs의 개정은 ITRs에 인터넷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 것인가 그리고 ITU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역할 규정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가 간에 큰 논쟁이 되었음. 이미 당시에 국제정치는 상향식 인터넷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정부 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을 지향하며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의 핵심 역할을 주장하는 다자간주의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지형으로 나누어져 대립하고 있었음(김상배 2017; 유인태 외 2017).
- ◆ WCIT-12의 ITRs 개정은 89개국의 찬성과 55개국의 반대라는 결과를 낳았음. 그런데 WCIT-12의 ITRs 개정에 대해서 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34개국 중에서, 한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반대하였는데, 오직 3개국만이 찬성을 하였음. 그 3개국에 멕시코, 터키와 더불어 한국이 포함됨. 이러한 예상외의 충격적인 선택 때문에 학자들이 한국을 포함한 이들 국가들을 “스윙국가”로 분류하며 그 이유를 분석할 정도였음(Maurer and Morgus 2014).
- ◆ 그런데 이와 같은 분석은 종종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의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었음(유인태 2019). 한국이 WCIT-12에서 ITRs에 대해 보인 입장은, 정부 주도의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즉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웠던 거버넌스 모델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
- ◆ 이러한 정부 주도의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에 변화가 2022년 시행된 인주법 개정으로 생기게 됨. 해당법은 2021년 3월 22일에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시작됨. 발의된 개정안은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주법’)으로서 2022년 1월 11일에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었음. 그리고 7월 12일부터 제도 시행이 이루어졌음. 조승래 의원의 대표 발의로 한 이

번 개정안은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의 운영 원리인 다중이해당사자 원칙을 기존 제도에서보다 더 반영하고 있음.

- ◆ 다중이해당사자주의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해당 자원의 관리(governance)에 참여하는 것을 지향하는데, 2022년 ‘인주법’의 핵심은 거버닝(governing) 모델의 변화, 즉, 결정을 내리는 통치 구조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변화를 가져옴. 무엇보다 기존의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가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변경되었음. 이로 인해 기존의 10명이라는 제한적 참여 규모도 20명으로 증폭되며, 다중이해당사자들을 더 폭넓게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음. 그리고 기존의 경우 정보통신 관련 기업의 임원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할 수 있었던 것이, 개정을 통해서, 정보통신 관련 기업의 임직원 뿐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이 고루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함(제6조 ④항 1~6호). 또한 기존의 심의위원회가 국내 인터넷 주소자원 거버넌스에서 단순 심의라는 권한에 국한되었지만, 개정을 통해서 심의뿐 아니라 의결의 권한도 얻게 되어서(제6조 ①항), 민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정책 결정이 더 용이하게 되었음. 마지막으로 개정안에는 기존의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이용 촉진 및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 하에 설치하게 함.
- ◆ 개정안의 마련 과정 또한 상향식 민관협치를 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가 2022년 1월 12일에,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ance, KIGA)와 KISA가 1월 14일에 회동하여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였음. 그 후 2월에는 IP관리대행자, 등록대행자, 학계, 법조계, 이용자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작업반에서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KIGA와 기존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초안의 검토를 행하였음. 나아가 3월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후에, 4월 규제심사, 5월 법제처심사 그리고 6월차관회의를 거쳐, 7월 법 시행으로 이어졌음. 2022년 인주법의 도입은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이 반영된 최초의 입법 사례이자, 글로벌 무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내 다중이해당사자 원칙의 인터넷 거버넌스 기반이 생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¹³⁾

다중이해당사자주의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해당 자원의 관리(governance)에 참여하는 것을 지향하는데, 2022년 인주법의 핵심은 거버닝(governing) 모델의 변화, 즉, 결정을 내리는 통치 구조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변화를 가져옴. 무엇보다 기존의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가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변경되었음. 이로 인해 기존의 10명이라는 제한적 참여 규모도 20명으로 증폭되며, 다중이해당사자들을 더 폭넓게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음

13) 2022년 2월 24일에 열린 인터넷거버넌스 연구협의회에서의 이원태 KISA 원장의 발언을 인용하였다.

Ⅲ. 결론을 대신하여

OEWG는 GGE와 달리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에 열려 있는 구조로 출범했는데, 이때문에 지금 참여국들 간에 이들의 참여 방식(modalities)에 대해 논쟁이 한참 진행 중임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방식에 대한 논쟁은, 필연적으로 한국은 어떠한 다중이해당사자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글로벌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을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됨. 본 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길 바램

- ◆ 국가 안보로서의 사이버 안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비정부 행위자의 사이버 안보 논의에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듯한 경향이 발전해 옴. 사이버 공간의 안보화는 그러한 경향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용어임. UN에서의 사이버 정부전문가그룹(GGE)에서의 논의는 정부행위자에 의해 거의 독점되다시피 진행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의 사이버 개방형 작업반(OEWG)에서는 이러한 경향성과는 다른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OEWG는 GGE와 달리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에 열려 있는 구조로 출범했는데, 이 때문에 지금 참여국들 간에 이들의 참여 방식(modalities)에 대해 논쟁이 한참 진행 중임. 이에 대한 분석은 차후 연구에서 다루어 지겠지만, 본 연구가 이러한 논쟁에 갖는 함의가 있음.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방식에 대한 논쟁은, 필연적으로 한국은 어떠한 다중이해당사자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글로벌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을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됨. 본 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길 바램.

참고문헌

- 김상배. 2017. “사이버 안보 국제규범의 세계정치: 글로벌 질서변환의 프레임 경쟁.” 『국가전략』 23(3): 153-180.
- 유인태, 백정호, 안정배. 2017. “글로벌 인터넷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변천: IANA 관리체제 전환을 통한 다중이해당사자 원칙의 재확립.” 『국제정치논총』 57(1): 41-74.
- Goldsmith, Jack, and Tim Wu. 2006. *Who Controls the Internet? Illusions of a Borderless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ofmann, Jeanette. 2016. “Multi-Stakeholderism in Internet Governance: Putting a Fiction into Practice.” *Journal of Cyber Policy* 1(1): 29-49
- Mueller, Milton L. 2010. *Networks and States: The Global Politics of Internet Governance*. Cambridge, MA: The MIT Press.
- Mueller, Milton, John Mathiason, and Hans Klein. 2007. “The Internet and Global Governance: Principles and Norms for a New Regime.” *Global Governance: A Review of Multilater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3(2): 237-254.
- Radu, Roxana. 2019. *Negotiating Internet Governance*.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Yoo, In Tae. 2022. “Emergence of Indo-Pacific Digital Economic Order: US Strategy and Economic Statecraft Toward China.”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10(2): 387-410.

❖ 저자 약력

■ 유인태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이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Columbi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근에는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디지털 공급망) 안보, 디지털 통상 등을 국제정치(경제)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관련 논문으로 “Bilateral Cyber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Northeast Asia” (2022), “Cybersecurity Crisscross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Unraveling the Cyber Capacity Building of East Asian Middle Powers Amid Rising Great Power Conflicts” (2022), “The Emergence of Indo-Pacific Digital Economic Order: U.S. Strategy and Economic Statecraft toward China” (2022), “경쟁적 사이버 안보 다자주의의 출현: 2004년 유엔 정부전문가 그룹부터 2021년 개방형 작업반까지의 분석” (2022), “자유무역질서의 파편화인가 아니면 분화인가? : 복수국가 간 특혜무역협정을 통한 디지털 무역 레짐들의 경합” (2020), “Internet Governance Regimes by Epistemic Community Formation and Diffusion in Asia” (2019) 등이 있다.

기획 및 감수: 임해용 연구실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